

Policy TREND

정책동향

### 산업자원부,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고유가 구조로 고착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 석유시장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에너지 절약형 설비투자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7% 세액 공제를 해줄 방침이며, 특히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에너지절약 캐시백(Cash Back)제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신,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키로하고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5%까지 공급한다.

이는 연간전력은 100만kw급 원전2기 발전량, 열은 우리나라 1개월 석유소비량인 석유 6,400만배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중요성 및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기술분야에 집중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등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발전차액제도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자원 개발 사업 확산을 위해 정부 융자지원 금리를 현재 3.5%에서 2.5%로 낮추고 융자 규모도 현재 57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중소기업청,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중기청에서는 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화 안정단계까지 지원하는 한편 사업화 초기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재무등급을 완화 적용하는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자금은 금년에 75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있으며, 대출금리 4.9%,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신용대출로 지원하고 있어, 여타의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보다 지원조건 측면 등에서 상당히 유리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코자 지원되는 자금이다.

이번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의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금지원 대상의 확대 및 사업화 안정단계까지 지원확대로 종래에는 지원대상을 “최근 3년 이내의 개발완료 기술”로 운영하던 3년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기존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성공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지도 사업 등을 통해 지도받은 기술을 포함하여 지원하며, 또한 종래에는 시제품이 나온지 1년이 안된 기술만 지원하던 것을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3년 이내로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안정화 단계까지 지원한다.

둘째로 재무등급 적용기준의 완화를 통한 영세기업의 지원으로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의 특성상 신청기업이 사업 초기의 영세기업임을 감안하여 일반 정책자금의 신용대출시 적용하는 재무등급 기준 “F3-이상”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하여 “F4+”이상 기업으로 함으로써 재무재표가 다소 열악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로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자금소요 지원으로 종래에는 업체당 지원한도를 5억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연간 5억원”으로 확대하여 기 지원업체도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넷째로기술평가보증을 통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 활성화로금년부터 순수 신용 대출 기준에는 다소 미달하지만 보증서부 대출은 가능한 기업도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동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서부 대출제도를 신규 도입했으며,기술평가보증을 통해 지원받는 기업도 종래에는 중진공에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방안 시행으로 해당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중진공에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곧바로 직접대출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중소기업청은 금년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의 개편으로 사업화를 신규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영세기업 뿐만 아니라 사업화 이후 안정화 단계까지의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있는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 산업자원부,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총' 구성

산업자원부는 가스, 석유 등 동북아지역권 내의 자원외교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에너지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자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및 민간 에너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한다.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에너지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동북아 협력과 남북한 에너지협력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산업자원부, 2005년 전력기반기금 1조7992억 조성

산업자원부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200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조7992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조성되며, 이중 전력수요관리 사업 등 경상 사업에 9586억원, 융자사업에 1611억원, 기금관리 및 사업운영에 74억원, 나머지 6721억원은 여유 자금으로 운용된다.

기금운영 방향은 전력수급의 안정유지,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도모, 사업의 전문성·효율성·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비 등이다.

사업별로는 수요관리사업에 899억2100만원을 책정해 올해보다 73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연구개발 사업은 1288억2100만원(전년대비 10% 증가), 인프라구축지원사업 388억9000만원(전년대비 12.8% 증가), 도서·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 943억6300만원,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7억9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2735억8600만원, 타에너지지원사업 2531억9800만원 규모를 각각 배정했다.

시행계획별로는 전력수요관리사업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668억원이 지원돼 축냉기기, 직접 부하관리제어, 원격제어에어컨 분야에 지원되고 하절기 부하관리요금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소요전력의 50% 이상을 연속 2일이상 줄이면 kWh 당 650원을 지원하며, 자율절전 참여업체에 대해서도 평균전력의 20% 이상 줄이면 kWh 당 140원을 줄여준다.

연구개발사업은 전기판매액의 1%를 목표로 전년대비 매년 10%씩 늘려가며, 특히 내년도는 전력기술 로드맵을 기초로 중·장기적인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전력기술개발사업과 전력IT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 혁신 전력기술 기술개발 사업에 집중투자한다.